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손해를 계획에 넣은 돈 — 수익 0%를 '성공'이라 부른 세니아스, 7억 5,000만 달러로 늘린 맥아더재단, 그리고 원조 삭감 속에 버틴 혼합금융 258억 달러	4
심판을 누가 고르는가 — 표준 기구를 향한 44개 단체의 원칙 10개, 5개월 만에 물러난 유럽 공시 위원회 의장, 그리고 기후 연대에 경고를 남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6
ESG 점수가 금리표의 한 줄이 됐다 — HSBC의 중소기업 '개선 대출', 그리고 은행 83곳 중 50곳이 자기 기준을 쓰는 녹색대출의 정의	9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11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매각 — 영화 플랫폼 레터박스드 인수전, 재단이 지배권을 쥔 채 상장한 스위스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공동체 소유 태양광에 돈을 대는 펀드	11
국가가 도매상이 된 시장 — 2년 새 두 배가 된 스페인 임팩트 투자, 자본을 층층이 쌓자는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돌봄을 투자 인프라로 보자는 아르헨티나	13
측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 투자자를 위해 만든 임팩트 측정, 피해를 정책 밖으로 밀어낸 캄보디아 소액금융, 그리고 점수와 직원 평가가 따로 노는 인증	15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17
1,000조 원이 지나갈 문 — 녹색대전환 전략의 재원 설계, 그리고 탄소 데이터를 요구받는 수출 중소기업 99.3%	17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남게 하는 법 — 광명의 조례·앵커기관 14곳·조달 데이터 1만 6,510건, 그리고 13일의 국제포럼	19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1
05 이번 호 전망	23
06 지난 전망 점검	23

07 편집장의 글	23
① 손해를 정직하게 적는 용기	23
② 규칙을 만드는 방의 의자	24
③ 소유와 측은은 한 쌍이다	24

THIS WEEK POINT

손해를 숨기지 않고 장부에 적은 돈이 나왔다. 미국의 가족재단 세니아스는 빈곤 현장에 넣은 3억 2,000만 달러짜리 '임팩트 우선' 포트폴리오가 4년 동안 낸 수익이 운영비와 물가를 빼면 사실상 0이라고 공개하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설계였다고 썼다. 같은 주 맥아더재단은 임팩트 투자 한도를 7억 5,000만 달러로 50% 늘렸고, 국제 혼합금융 네트워크 컨버전스는 원조가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2025년에도 혼합금융 시장이 258억 달러로 버텼다고 집계했다. 손실을 감수하는 돈의 역할이 숫자로 드러난 한 주였다.

규칙을 만드는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이 동시에 터졌다. 국제투명성기구와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를 포함한 44개 시민단체가 온실가스 회계와 기후목표 표준을 만드는 기구들에 이해충돌 방지 원칙 10개를 요구했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도 서명했다.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다루는 위원회의 의장은 3년 임기 중 5개월 만에 물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 운용사 조사를 접으면서 기후 연대 참여 자체에 경고를 남겼다.

한국에서는 같은 질문이 돈이 지나갈 문 앞에 섰다. 정부는 10년간 약 1,000조 원을 동원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500조 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고르는 평가에 기후금융 지표를 넣은 기초자치단체는 22%였고, 수출 중소기업 300곳 중 99.3%가 탄소 데이터를 요구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광명시는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남게 하는 조례와 조달 데이터 1만 6,510건을 들고 13일 국제 포럼을 연다.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임팩트의 비용은 '누구의 어느 장부에 적히느냐'로 결정된다

이번 주 꼭지들을 묶는 연결 고리는 장부다. 세니아스는 손실을 자기 장부에 정직하게 적었고, 그래서 0%라는 숫자가 실패가 아니라 기부와 같은 성격의 지출로 읽힌다. 반대편에 캄보디아 소액금융 위기가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민간투자 기관은 차입자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가 자기 환경·사회 정책의 범위 밖이라며 옴부즈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가 존재하는데 기록될 장부가 없었던 것이다.

표준 기구의 거버넌스 논쟁도 같은 구조다. 온실가스 회계 기준은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구매계약을 배출량 장부에서 떼어 별도 칸에 적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그 칸의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기업이 지나치게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외부 ESG 점수를 대출 금리표의 한 줄로 옮겼고, 한국의 지자체 금고 평가는 같은 은행의 기후금융 실적을 지자체마다 1점에서 6점까지 다르게 적는다.

그래서 이번 주 실무자가 확인할 것은 하나다. 우리 조직이 만드는 비용과 편익이 지금 어느 문서에 적히고 있고, 적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적히지 않는 편익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적히지 않는 피해는 누구의 책임도 되지 않는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손해를 계획에 넣은 돈 — 수익 0%를 '성공'이라 부른 세니아스, 7억 5,000만 달러로 늘린 맥아더재단, 그리고 원조 삭감 속에 버틴 혼합금융 258억 달러

임팩트 투자 업계는 오랫동안 "임팩트를 추구해도 수익은 희생되지 않는다"는 말로 자본을 설득해 왔다. 이번 주 미국의 가족재단 세니아스는 정반대의 숫자를 내놓았다. 2021년 1억 9,600만 달러였던 임팩트 우선 포트폴리오는 2025년 3억 2,000만 달러로 커져 재단 자산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 약 90개 펀드와 60건의 직접 투자로 이뤄진 이 포트폴리오의 지난 4년 순 내부수익률은 3.2%였다. 여기서 운영비(포트폴리오 가치의 약 1.1%)와 평균 물가상승률(약 2.5%)을 빼면 실질 순수익은 사실상 0이다. 세니아스는 이를 "임팩트를 최대로 낸, 완전히 성공한 결과"라고 불렀다. 원금을 지키면서 같은 돈을 계속 돌려 쓸 수 있다면, 빈곤 현장에 닿는 깊은 임팩트에는 분명한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을 정직하게 치른 것이라는 논리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90개 펀드 가운데 55개가 대출형이고, 이 신용 펀드들은 연 4~5%를 안정적으로 냈다. 반면 신흥시장 벤처와 사모펀드 지분은 합산 기준으로 손실이었다. 직접 대출의 연간 상각률은 1.6%였고, 재단 분배 의무를 채우는 프로그램 연계 투자는 순수익 1.0%로 전체(4.9%)보다 크게 낮았다. 같은 주 자산 100억 달러의 맥아더재단은 임팩트 투자 한도를 7억 5,000만 달러로 정했다. 5억 달러 규모 포트폴리오를 50% 늘리는 것이고, 1983년 이후 원금을 돌려 쓰며 10억 달러 넘게 투자해 온 팀이 말한다. 재단은 연간 지출을 관행인 5%가 아니라 6% 이상으로 유지하는 약속도 2028년까지 늘렸다.

고령 분야 재단들도 움직인다. 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스캔재단은 순자산의 5%(약 1,300만 달러)를 떼어 돌봄의 접근성과 질에 투자하고 목표 수익률을 4~5%로 잡았다. 고령 분야 재단 약 150 곳이 모인 연합의 자산은 450억 달러에 이른다. 시장 전체의 숫자는 컨버전스의 연례 보고서가 보여 준다. 2025년 혼합금융 거래는 181건, 258억 달러로 전년(257억 달러)과 비슷했다. 공적개발원조가 4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도 버틴 것은 민간 투자가 88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27% 늘었기 때문이다. 양허성 자금 1달러가 끌어온 시장 금리 자본은 5.33달러로 역대 평균(3.92달러)보다 높았고, 기후 적응 분야 자금은 24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133% 늘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3개 매체가 「혼합금융」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른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아직 '손실을 감수하는 돈'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호에 전했다. 시행령 논의에서는 공적 자금의 부실 위험을 민간 중개기관이 혼자 떠안지 않도록 손실을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다. 세니아스와 맥아더의 숫자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손실을 감수하는 층이 어디인지, 그 층이 얼마의 수익을 포기하는지를 처음부터 장부에 적어 두면 그 돈은 실패가 아니라 설계가 된다. 시행령의 사회연대금융 조항에 '선순위 손실 흡수' 층을 명시하지 않으면, 국내 민간 자본은 다시 위험이 다 걸힌 뒤에야 들어오는 관행을 반복하게 된다.



심층 — 손실을 '설계'로 바꾸는 세 가지 조건 (세니아스 임팩트 우선 포트폴리오 · 맥아더재단 · 컨버전스 혼합금융 보고서)

왜 지금 중요한가. 원조가 빠지는 자리를 민간 자본이 메운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컨버전스 보고서는 그 기대의 한계를 함께 보여 준다. 민간 투자는 27% 늘었지만 대부분 상업은행이었고, 시장 규모 자체는 3년째 250억 달러 언저리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레버리지가 1대 8에 이르러야 기본 시나리오보다 시장이 83% 커진다고 계산했다. 결국 상업 자본을 움직이는 것은 먼저 손실을 받아 주는 층이다. 그 층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독일의 임팩트 운용사 대표는 양허성 자금이 줄어든 현실이 이미 펀드 단위에 체감된다고 말했다. 세니아스와 맥아더의 발표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 층의 비용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수익률 목표를 처음부터 거래별로 나눈 기관이다. 세니아스는 위험이 걸린 대출은 2%대로, 진짜 위험이 큰 거래는 10% 가까이 요구하는 식으로 2~10% 범위를 썼고, 그 결과 총수익 4.5%라는 손익분기선을 맞췄다. 신용 펀드처럼 예측 가능한 자산을 바닥에 깔아 둔 포트폴리오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시장 수익률과 임팩트를 동시에'라는 약속으로 자금을 모은 신흥시장 벤처 펀드다. 세니아스는 이 자

산군이 합산 손실을 냈다며, 자본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선 자본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컨버전스가 지적한 브라질 집중도 위험 요인이다. 브라질의 혼합금융 플랫폼 하나가 30억 달러, 시장의 약 11%를 차지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실무안이 11월까지 나오는 지금이 손실 분담 구조를 문서에 넣을 시점이다. 방법은 세 가지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회연대금융 펀드에 후순위·선손실 층을 명시하고 그 비율을 공개할 것, 프로그램 연계 투자처럼 '손실을 감수하는 자금'과 일반 임팩트 투자를 회계상 나눠 각각의 목표 수익률을 따로 둘 것, 재단과 기업 사회공헌 자금이 보조금과 대출을 섞어 쓸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허락 없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국내 재단과 기업 사회공헌 조직은 지난해 집행한 보조금 가운데 원금 회수가 가능했던 사업이 몇 건이었는지부터 세어 볼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세니아스의 '0%'는 조건이 붙은 숫자다. 세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물가가 계산에 쓴 2.5%보다 높았다는 점을 재단 스스로 밝혔다. 실질 가치로는 원금이 줄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손실을 '설계'라고 부르는 순간 성과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 손실을 감수하는 자본일수록 그 대가로 얻은 임팩트를 더 엄격하게 기록해야 정당성이 생긴다. 컨버전스의 '버팀' 역시 원조 삭감의 효과가 사업 주기를 따라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CeniARTH's impact-first portfolio is not making money. That's the point. · ImpactAlpha (미국, 2026-10) — MacArthur Foundation's 'impact banker' gets a \$750 million mandate, up 50% · ImpactAlpha (미국, 2026-10) — Adding impact investments to the philanthropic toolkits of grantmakers in aging ·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Blended finance market remains resilient in 2025 despite aid cuts — Convergence report

심판을 누가 고르는가 — 표준 기구를 향한 44개 단체의 원칙 10개, 5개월 만에 물러난 유럽 공시 위원회 의장, 그리고 기후 연대에 경고를 남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기후 목표를 판정하는 국제 표준은 몇몇 기구가 만든다. 온실가스 회계의 기본 틀인 GHG 프로토콜, 기업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번 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국제투명성기구, 참여과학자연대를 포함한 4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기구들을 향해 '기업 표준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위한 10대 원칙'을 내놓았다. 요지는 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도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으니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서명했다. 이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실제 개편 작업이 있다.

GHG 프로토콜은 9월 23일 '행동 및 시장수단' 기준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 결과를 공개했는데, 참여한 400명 넘는 이해관계자 가운데 84%가 배출량과 시장 수단, 감축 효과를 구분해 보고하는 새 체계를 지지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전력구매계약, 저탄소 철강·지속가능항공유 인증서 같은 시장 수단을 기존 배출량 인벤토리와 떼어 별도로 보고하자는 안은 87%의 지지를 받았다. 어떤 수단을 인정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기업의 감축 성적표를 좌우하게 되니, 그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가 곧 쟁점이 된 것이다. 통합 기업표준 초안은 2027년 2분기, 최종안은 2028년 4분기에 나온다. 유럽에서도 같은 질문이 불거졌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작업을 맡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지속가능성 보고위원회 의장 케르스틴 로파타가 3년 임기 중 5개월 만에 물러났다. 기구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은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견을 주된 요인으로 보도했고, 독일 회계기준위원회 회장은 사임 경위를 거버넌스 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행은 덴마크 산업연맹 출신 위원이 맡았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의 기후 투자자 연대 참여에 대한 조사를 집행 조치 없이 끝냈다. 다만 대형 패시브 투자자가 기후 관련 단체에 참여해 공동 행동을 하면 지분 5%를 넘는 '집단'으로 묶여 더 무거운 공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5개 매체가 「GHG 프로토콜·SBTi」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3건이다.

한국 시사점 — 국내 기업이 앞으로 따를 규칙도 결국 이 기구들의 결정에서 나온다.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월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시기준 제1호와 제2호를 확정했고, 금융위원회는 7월 로드맵에서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제 표준이 인증서와 구매계약을 배출량과 분리해 적게 되면,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로 감축 실적을 채워 온 국내 기업의 숫자는 보고서 안에서 다른 칸으로 옮겨 간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서명은 국내 투자자도 규칙 제정의 거버넌스를 따져 묻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심층 — 규칙의 공정성이 규칙의 내용만큼 중요해진 이유 (44개 단체 10대 원칙 · GHG 프로토콜 공개 의견 접수 · 유럽 공시 위원회 의장 사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왜 지금 중요한가. 지난 호에 이 지면은 미국 대형 인덱스 운용사가 의결권 선택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주주제안 규칙의 폐지가 검토되는 흐름을 전했다. 이번 주는 그 흐름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 표가 어떻게 행사되느냐를 넘어, 그 표와 공시를 판정하는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가 문제가 됐다. 이유는 표준의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발적 지침이던 탄소 회계 기준이 각국 의무 공시의 바탕이 되고, 감축 목표 검증이 금융 조건과 조달

평가에 쓰이면서 표준 한 줄의 해석이 기업의 비용을 바꾸게 됐다. 규칙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 규칙을 만드는 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커진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실제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이다. 시장 수단과 물리적 배출이 분리되면 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로 줄인 몫이 인증서 구매와 구별되어 보인다. 이해충돌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표준 제정에 참여할 자원이 적었던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불리해지는 쪽은 인증서 구매로 넷제로 주장을 채워 온 기업, 그리고 표준 제정 과정에 대표를 보내 해석을 유리하게 이끌어 온 업종 단체다. 미국의 경고는 다른 방향의 패자를 만든다. 대형 패시브 운용사는 공동 관여에서 한발 물러설 유인이 커졌고, 그만큼 개별 기업에 대한 집단적 압력은 약해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금융위원회 로드맵상 2028년 의무화까지 남은 시간은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개편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GHG 프로토콜 통합 초안이 2027년 2분기에 나오면 공개 의견 접수가 열린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팀은 지금 보고서의 재생에너지 실적 가운데 인증서·구매계약 비중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투자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처럼 표준 거버넌스 문제에 공동 서명이나 의견서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둘 수 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견 접수 절차가 이번 10대 원칙에 비춰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일도 국내 시민사회가 지금 할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이해충돌을 이유로 기업을 표준 제정에서 빼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칙이 나올 위험이 있다. 공개 의견 접수에서도 새 보고 항목을 처음엔 선택 사항으로 두자는 요구가 나왔는데, 기업마다 데이터와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공정성과 실행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문제다. 또 유럽 위원회 의장의 사임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잘못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기업이 심판까지 고르면 안돼"...GHG Protocol·SBTi·ISO에 거버넌스 개혁 요구 · IMPACT ON (한국, 2026-10) — GHG프로토콜, PPA·REC 배출량과 분리한다... 탄소회계 개편 추진 · ESG Today (국제, 2026-10) — 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Chair Kerstin Lopatta Steps Down After 5 Months · ESG Today (국제, 2026-10) — SEC Drops Investigation into BlackRock, State Street, with a Warning Over Participation in Climate Groups

ESG 점수가 금리표의 한 줄이 됐다 — HSBC의 중소기업 '개선 대출', 그리고 은행 83곳 중 50곳이 자기 기준을 쓰는 녹색대출의 정의

지난 호 이 지면은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안에 위험을 잘못 져 '공포 프리미엄'이 숨어 있다는 연구를 전했다. 이번 주에는 금리를 정하는 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HSBC는 7일 유럽 대륙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개선 대출'을 내놓았다. 에코바디스, CDP, 인레이트처럼 은행이 인정한 외부 평가기관의 ESG 점수를 대출 조건에 반영하고, 대출 기간 동안 해마다 점수를 확인한다. 점수가 미리 정한 기준 이상 오르면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떨어지면 금리가 오를 수 있으며, 일정 범위 안에 머물면 금리도 그대로다.

대출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특정 용도가 아니라 일반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이 상품이 기존 지속가능연계대출과 다른 점은 기업별 핵심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개별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비용이 작은 기업에는 금리 혜택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HSBC는 2024년 영국에서 이 상품을 처음 내놓은 뒤 아시아와 중동으로 넓혔다. 같은 주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녹색대출의 정의를 단순하게 만들자는 보고서를 냈다. 유럽연합에는 아직 널리 공유된 녹색대출 정의가 없다.

기준이 되는 유럽 녹색분류체계는 은행들이 데이터 확보와 '중대한 피해 금지' 원칙 검증이 어렵다고 느끼는 탓에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보고서가 인용한 유럽은행감독청 조사에서 은행 83곳 가운데 50곳은 자체 기준을 썼고, 분류체계의 기술 심사 기준만 쓰는 곳이 12곳, 피해 금지와 최소 안전장치까지 모두 적용하는 곳은 7곳이었다. 건물은 유럽연합 에너지 소비의 약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36%를 차지하고, 가계 대상 신규 대출의 11~12%가 이미 녹색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고서는 분류체계를 최상위 기준으로 남기되 건물 에너지 성능 등급으로 판정하는 단순한 경로를 함께 두는 두 단계 정의를 제안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green loan·녹색대출」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서는 은행의 기후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칸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행정안전부 자료(8월 31일 기준)를 전수 분석했더니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8곳, 기초자치단체 227곳 중 50곳(22%)만 금고 평가에 기후금융 지표를 넣었다. 그 50곳 중 43곳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160곳 중에는 7곳(4.4%)뿐이었다. 배점도 1점에서 6점까지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주요 은행이 이미 다 한 탈석탄 선언 여부를 아직 지표로 쓴다. 같은 은행의 같은 실적이 어느 지자체 입찰이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셈이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지적한 '정의 부재'가 한국 공공금고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심층 — 검증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녹색금융의 크기를 정한다 (HSBC 지속가능성 개선 대출 · 이탈리아 중앙은행 녹색대출 정의 · 국내 지자체 금고 평가)

왜 지금 중요한가. 녹색금융의 병목은 자금이 아니라 판정 비용이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대기업에는 잘 맞았지만, 목표 설정과 제3자 검증에 드는 비용이 고정비라서 작은 기업일수록 금리 혜택보다 비용이 컸다. HSBC는 이 고정비를 외부 평가 점수로 대체해 없앴고,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분류체계의 복잡한 검증 대신 에너지 등급이라는 이미 있는 숫자를 쓰자고 했다. 둘 다 '새 측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측정의 재사용'이다. 중소기업까지 녹색금융이 내려가려면 이 방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두 기관이 같은 주에 내놓은 것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외부 ESG 평가를 이미 받은 중소 협력사다. 대기업 공급망 요구로 받아 둔 에코바디스 점수가 금리 할인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생긴다. 평가기관도 점수가 금리에 연결되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불리해지는 쪽은 평가를 받을 여력이 없는 영세 기업이다. 점수가 없으면 이 상품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점수가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구조라서, 평가 방법론이 바뀌어 점수가 흔들리는 기업은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비용을 질 수 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녹색금융 이행실적'과 '탄소중립 기여도'를 자율 항목 예시로 넣었지만 공통 인정 범위와 증빙 기준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탈리아 중앙은행식의 단순한 공통 정의다. 예를 들어 '관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녹색·전환금융 공급 실적'처럼 은행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는 지표를 표준 항목으로 정하면,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과 배점이 정리된다. 국내 은행은 HSBC 방식처럼 협력사가 이미 받은 외부 ESG 평가를 금리에 연동하는 소액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예고한 대로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주거은행 선정으로 같은 평가를 넓히는 논의도 이어질 것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외부 점수에 금리를 연결하면 '점수 관리'가 실제 개선보다 앞설 위험이 있다. 평가기관마다 방법론이 다르고, 설문 응답의 충실도가 점수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또 HSBC 상품에서는 점수 개선 기준을 은행과 기업이 미리 정하는데, 그 기준이 느슨하면 녹색 표시만 붙은 일반 대출이 될 수 있다. 단순화는 문턱을 낮추지만, 무엇을 개선으로 볼지에 대한 엄격함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HSBC Launches Loans with Rates Tied to ESG Scores for European Small, Medium Businesses · IMPACT ON (한국, 2026-10) — HSBC, ESG 점수 따라 기업 대출금리 조정...에코바디스·CDP 평가 연계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Green loan, Banca d'Italia propone criteri più semplici per edilizia e immobili · IMPACT ON (한국, 2026-10) — 790조 기후금융 시대라더니... 지자체 금고 10곳 중 8곳은 녹색 전환 '깜깜이'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매각 — 영화 플랫폼 레터박스드 인수전, 재단이 지배권을 쥔 채 상장한 스위스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공동체 소유 태양광에 돈을 대는 펀드

이번 주 미국과 유럽에서 '누가 회사를 소유하느냐'를 임팩트의 핵심 변수로 놓는 시도가 동시에 나왔다. 3,000만 명 넘는 이용자를 가진 영화 리뷰 플랫폼 레터박스드는 올봄부터 매각설에 올라 있었다. 3년 전 약 5,000만 달러에 지분 60%를 사들인 캐나다 사모펀드가 지분을 팔려 하고, 대형 언론사와 영화사, 사모펀드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며 기업가치가 3억 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도됐다. 이번 주 영화인과 팬, 임팩트 투자자들이 '레터박스드포올' 캠페인을 시작했다. 플랫폼을 사들여 공동체 소유 회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백만~수천만 달러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일반 팬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최소 100달러를 투자하거나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을 이끄는 공익법인 대표는 플랫폼의 기업가치가 이용자들이 쌓은 창작 노동을 반영한다며 "공동체가 상품이 아니라 주인이 될 기회"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는 다른 방식이 나왔다. 제네바의 클라우드 기업 인포마니악은 10월 1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지만 지배권은 그대로 남겼다. 제네바 주 당국의 감독을 받는 공익재단이 비상장 A주를 모두 보유하는데, 이 주식은 자본의 14.7%로 의결권의 63.3%를 갖는다. 재단 동의 없이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창업자와 주주들은 5월에 만장일치로 자기 의결권을 줄여 재단에 넘겼고, 독립성·디지털 주권·개인정보 보호·환경 책임 등 9개 원칙을 담은 주주 헌장을 공증한 뒤에야 1905년부터 상장돼 있던 회사를 역합병하는 방식으로 상장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인포마니악은 이 거래소에 상장한 첫 비코프 인증 기업이다. 미국 오클랜드의 캔디드그룹은 공동체 소유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출하는 펀드를 7,150만 달러로 마감했다. 은행이 보기엔 "너무 작고, 검증이 덜 됐고, 너무 새로운" 개발사에 착공 전부터 완공 후까지 유연한 대출을 주는 구조로, 맥아더재단 등의 후순위 대출이 바닥을 받쳤고 지역 자문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낸다. 이미 개발사 12곳에 3,500만 달러를 빌려줬다. 텔사에서는 1921년 학살로 파괴된 흑인 상업지구 그린우드의 부를 되살리려는 신탁이 1억 50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문화유산 6,000만 달러, 교육·창업 2,100만 달러, 주거 2,400만 달러로 나눠 대출과 보조금을 섞어 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community ownership」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층 — 소유 구조를 바꾸면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가 바뀐다 (레터박스드포올 · 인포마니악 상장 · 애프터글로 기후정의 펀드 · 그린우드 신탁)

왜 지금 중요한가. 임팩트 업계는 그동안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평가해 왔지 누가 기업을 갖는지는 덜 물었다. 이번 주 사례들은 소유 구조가 임팩트의 지속성을 정한다는 주장을 실물로 보여 준다. 인포마니악의 표현이 정확하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회사의 경제적 가치이지 독립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자 데이터가 곧 자산인 플랫폼, 지역에 묶인 에너지 설비, 공동체의 역사가 걸린 땅처럼 매각 순간 가치가 빠져나가는 자산일수록 소유 구조가 임팩트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가 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창업자가 지배권을 넘길 각오가 된 회사다. 인포마니악은 상장 전에 의결권 이전과 헌장 공증을 먼저 끝냈고, 그래서 외부 자본을 받으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소규모 개발사와 공동체 조직도 유리해진다. 애프터글로처럼 후순위 자본이 받쳐 주는 펀드가 있으면 은행 문턱 아래에 있던 사업이 실적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 불리해지는 쪽은 이용자 기반을 키워 되파는 것을 전제로 한 투자 모델이다. 레터박스드 캠페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용자가 플랫폼 가치의 원천이라는 주장이 인수전의 공개 의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각 협상의 조건을 바꾼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는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법적 기반이 넓어졌지만, 상장 기업이 공익재단에 지배권을 남기는 구조나 이용자가 플랫폼을 공동 소유하는 모델은 아직 드물다. 지금 해 볼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매각이나 승계를 앞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인포마니악처럼 '원칙을 약화시킬 수 없는 주주 헌장'을 미리 공증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 논의에 노동자·이용자 소유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조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출발점도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사는 투자 계약서에 매각 시 미션 보존 조항을 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공동체 소유는 자동으로 좋은 경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천만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레터박스드 캠페인은 아직 매각 측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공개 제안 단계다. 인포마니악 구조에서도 재단 이사회가 원칙을 강화만 할 수 있고 약화할 수 없다는 장치가 실제 위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Public bid to acquire social film network Letterboxd is a preview of people power](#) · Impact Entrepreneur (미국, 2026-10) — [Infomaniak Lists on the Swiss Exchange Without Selling Control](#) · ImpactAlpha (미국, 2026-10) — [Afterglow Climate Justice Fund raises \\$71 million to finance community-owned green projects](#) · ImpactAlpha (미국, 2026-10) — [Greenwood Trust aims to rebuild the wealth of Tulsa's Black Wall Street](#)

국가가 도매상이 된 시장 — 2년 새 두 배가 된 스페인 임팩트 투자, 자본을 층층이 쌓자는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돌봄을 투자 인프라로 보자는 아르헨티나

스페인의 임팩트 투자 연합체 스페인NAB와 IE 대학이 이번 주 마드리드의 연례 행사에서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5년 스페인의 임팩트 투자 집행액은 32억 1,700만 유로로 2023년의 두 배였다. 직접 투자가 15억 1,700만 유로에서 26억 4,400만 유로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8,400만 유로에서 5억 7,300만 유로로 늘었고, 은행의 임팩트 금융은 17억 4,000만 유로에서 18억 3,400만 유로로 소폭 늘었다. 임팩트 자본의 공급 규모는 50억 5,100만 유로로 2년 전보다 51% 커졌고, 조사 참여자의 74%는 임팩트 운용 자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가 만든 도매 기관이 있다.

스페인은 2023년 정부 재원 4억 유로로 사회적임팩트기금을 만들고 국영 개발금융기관 코피데스에 운용을 맡겼다. 영국의 베테리아사이어티캐피탈과 같은 역할이다. 2025년 초부터 자금을 내보낸 이 기금은 재원 전액을 약정했고, 13억 3,000만 유로가 넘는 투자를 끌어왔다고 코피데스 대표가 밝혔다. 행사에서 남은 과제로 꼽힌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돈이 닿게 하는 일이었다. 노동·사회적경제부와 사회적경제 연합체, 장애인 고용 재단, 협동조합 대표들이 그 장벽을 논의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임팩트 네트워크 라틴팩토는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연례 모임을 열고 비슷한 결론을 냈다. 이 지역에는 자본도 기업가도 부족하지 않은데 돌을 잇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다.

자선 자본, 측매 자본, 임팩트 투자자, 개발은행, 상업 자본이 따로 움직이니 상업 자본은 위험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자본의 층'을 설계하고, 이미 투자 가능한 기회가 아니라 투자 가능해지기까지의 여정에 돈을 대자고 했다. 임팩트를 지속가능경영팀의 대화에서 재무제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르헨티나의 지속가능경영 매체는 같은 시기 열린 임팩트 위크의 논의를 전하며 돌봄 경제를 에너지·교통·디지털과 같은 인프라로 보자는 관점을 소개했다. 아이와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맡길 곳이 없으면 그 비용은 가족,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 포기로 치러진다는 것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4개 매체가 「inversión de impacto·SpainNAB」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도 정부 재원으로 임팩트 시장을 키우는 장치가 있지만 규모와 역할은 아직 작다. 지난달 이 지면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첫 설계도와 함께 임팩트펀드 367억 원 결성을 전했다. 스페인의 4억 유로 기금이 재원 전액을 약정하고 그 세 배가 넘는 민간 투자를 끌어온 경험은, 도매 기관의 성과를 '얼마를 넣었나'가 아니라 '얼마를 끌어왔나'로 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8월 20일 통과된 지금, 시

행령에 들어갈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의 성과 지표를 민간 자본 유치 배율로 정해 두는 것이 스페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교훈이다.



심층 — 도매 기관이 시장을 키우는 방식과 그 한계 (스페인NAB·IE 대학 보고서 · 코피데스 사회적임팩트기금 · 라팀팩토 임팩트 마인즈 · 아르헨티나 임팩트 워크)

왜 지금 중요한가. 스페인의 숫자는 임팩트 시장이 '자연스럽게' 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간접 투자가 2년 새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펀드를 통해 돈이 흐르는 통로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 통로를 만든 것이 정부가 재원을 댄 도매 기관이다. 영국이 휴면에 금으로 만든 베테르소사이어티캐피털, 스페인의 사회적임팩트기금, 그리고 라틴아메리카가 요구하는 '투자 인프라'는 모두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다. 개별 기업과 개별 투자자를 연결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니 그 사이에 공공이 중간 도매상을 세운다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도매 기관의 자금을 받아 펀드를 만드는 중간 운용사와, 그 펀드가 찾는 '조금만 도우면 투자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다. 은행도 유리하다. 스페인에서 은행 임팩트 금융은 이미 18억 유로 규모다. 불리해지는 쪽은 투자 가능성의 문턱 한참 아래에 있는 작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돈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따로 논의된 것 자체가, 시장이 커져도 가장 작은 조직은 여전히 밖에 있다는 방증이다. 라팀팩토가 '투자 가능해지기까지의 여정'에 돈을 대자고 한 것도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기금의 근거를 담았고, 시행령 실무안이 11월까지 나온다. 지금 정할 수 있는 것은 전담기관의 성과 지표다. 스페인처럼 민간 자본 유치 배율을 핵심 지표로 두되, 투자 가능성 문턱 아래 조직을 위한 별도 창구를 함께 두는 설계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돌봄 인프라 관점도 한국에 직접 연결된다. 장기요양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돌봄 기관의 시설과 운영 자금을 사회연대금융의 우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스페인 보고서의 '50억 유로'와 '32억 유로'는 다른 숫자다. 앞의 것은 임팩트 자본의 공급 규모이고 뒤의 것은 실제 집행액이다. 성과를 홍보할 때 큰 숫자만 인용하면 시장이 실제보다 커 보인다. 또 은행 임팩트 금융이 2년간 5% 남짓 늘어난 데 그친 점은, 도매 기관이 펀드 시장은 키웠지만 주류 금융의 행동은 아직 크게 바꾸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도매 기관의 재원이 다 약정된 지금, 후속 재원이 없으면 성장 속도는 꺾일 수 있다.

출처: [Compromiso Empresarial \(스페인, 2026-10\) — La inversión de impacto en España se duplica hasta los 3.200 millones en 2025](#) ·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Spain's impact investments surpass €5bn – latest SpainNAB figures](#) · [ImpactAlpha \(미국, 2026-10\) — Latin America needs new investment architecture](#)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10\) — La economía del cuidado emerge como nueva infraestructura para la inversión de impacto](#)

측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 투자자를 위해 만든 임팩트 측정, 피해를 정책 밖으로 밀어낸 캄보디아 소액금융, 그리고 점수와 직원 평가가 따로 노는 인증

미국의 개발금융 매체에 실린 기고는 임팩트 측정·관리 분야의 불편한 진단으로 시작한다. 지금 모이는 임팩트 데이터의 대부분은 의사결정에 쓰이지 않고 투자자의 요구를 채우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측정 인프라가 일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쪽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월 몬트리올에 모인 측정 전문가 약 100명의 논의를 정리한 필자들은 피투자 기업을 데이터 공급원이 아니라 임팩트의 주체로 대하고, 지표를 함께 만들고, 모든 데이터를 다시 돌려주라고 제안했다. 측정이 기업의 시간과 인력, 선의를 빼 가기만 하는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매체에 실린 또 다른 글은 측정이 실패했을 때의 대가를 보여 준다. 캄보디아 소액금융 부문은 5년째 위기다. 빚이 감당할 수준을 넘은 차입자들이 땅을 팔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냈다. 필자에 따르면 2016년 7월 업계와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성장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한 바로 그달, 세계은행그룹의 민간투자 기관은 가장 빠르게 크던 대형 소액금융기관에 9,000만 달러 대출을 주선했다. 이 기관의 옴부즈맨은 2년 조사 끝에 올해 6월, 차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투자자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감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결론 냈다. 이사회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가 기관의 환경·사회 정책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라며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두고 결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썼다.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인증의 측정에도 질문을 던진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지역에서 비코프와 공동선경제 인증을 받은 기업 172곳과 비교 집단 2만 26곳을 직원 평가 플랫폼 데이터와 대조했더니, 인증 기업은 직원 평가가 더 좋았지만 인증 점수의 높낮이와 직원 평가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이탈리아 파도바의 무료 급식 기관은 사회 성과 보고서를 만들며 "식사 한 끼를 세는 것은 쉽지만 그 식사가 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고민을 공유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impact measurement·임팩트 측정」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서도 측정을 금융 조건에 직접 연결하는 상품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일하는재단의 'WT 동행자금'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최대 1억 원을 연 3%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낸 이자의 25%를, 일자리·지역 임팩트·기업 고유 미션 가운데 사회성과 목표 1개 이상을 달성하면 25%를 더 돌려준다. 신청은 12일까지다. 측정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고가 말한 '되돌려주는 측정'에 가깝다. 다만 그 목표를 기업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쓰는 지표로 함께 정하느냐, 심사용으로만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품이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심층 — 측정의 범위 밖에 있는 피해는 누구의 책임도 되지 않는다 (임팩트 측정·관리 기고 · 캄보디아 소액금융 위기 · 인증 점수와 직원 평가 연구 · 파도바 급식 기관)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주 세 글은 측정의 실패가 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첫 단계는 측정이 측정받는 쪽에 쓸모가 없어 데이터가 먼지만 쌓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점수와 실제 경험이 어긋나는 것으로, 인증 점수가 직원이 느끼는 일터와 상관없었다는 연구가 그 예다. 가장 심각한 단계는 측정 체계가 처음부터 특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짜인 경우다. 캄보디아에서는 과잉 대출의 위험이 경고됐고 업계가 스스로 대출 지침과 월간 대시보드까지 만들었는데, 가장 큰 투자 기관의 정책은 차입자 피해를 자기 범위 밖으로 두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측정을 경영 도구로 쓰는 조직이다. 파도바의 급식 기관처럼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정하고 지표를 고르는 조직은 같은 데이터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피투자 기업과 지표를 함께 만드는 투자자도 데이터 품질과 관계에서 이득을 본다. 불리해지는 쪽은 인증 배지나 보고서 분량으로 임팩트를 증명해 온 조직이다. 점수가 실제 경험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쌓일수록 배지가 전하는 메시지의 값은 떨어진다. 국제 개발금융 기관도 피해를 인정하면서 책임을 정책 범위로 피한 결정 때문에 신뢰 비용을 치르게 됐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일하는재단의 WT 동행자금 선정 절차는 10월 서류·신용평가, 11월 현장평가와 최종심사, 12월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다. 사후관리가 상환 완료까지 계속되는 만큼, 이 기간에 사회성과 목표를 기업과 함께 다듬는 과정을 넣으면 국내에서 '되돌려주는 측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사는 지금 받고 있는 피투자사 보고 항목 가운데 실제 투자 결정에 쓴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고, 쓰지 않는 항목은 줄이는 것부터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 기관은 대출 심사 때 차입 조직이 지는 부담과 피해를 묻는 항목을 넣어, 측정 범위 밖에 피해가 남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측정을 줄이자는 주장이 측정 회피로 변질될 수 있다. 기고의 요지는 덜 재자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게 재자는 것이다. 캄보디아 사례도 한 필자의 관점이며, 필자 스스로 업계 지침 작성과 옴부즈맨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책임은 여러 주체에 나뉘어 있고, 국제기관 한 곳만의 잘못으로 단순화하면 같은 구조가 다른 곳에서 반복된다. 인증 연구도 상관관계를 본 것이라 인증이 직원 만족을 낳는다거나 낳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출처: NextBillion (미국, 2026-10) — [Right-Sizing IMM: Five Ways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Can Work for Enterprises — Not Just Investors](#) · NextBillion (미국, 2026-10) — [Is the World Bank to Blame for the Cambodian Microfinance Crisi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국제, 2026-09) — [Beyond the Badge: Do Sustainable Business Certifications Reflect Employees' Workplace Experiences?](#)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09) — [Misurare non basta: come dare senso agli strumenti di valutazione nel Terzo Settore](#)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서민금융진흥원-함께일하는재단, 사회현대경제기업 'WT 동행자금' 융자 참여기업 모집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1,000조 원이 지나갈 문 — 녹색대전환 전략의 재원 설계, 그리고 탄소 데이터를 요구받는 수출 중소기업 99.3%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2035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감축목표를 산업정책과 연결한 실행전략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모두 약 1,000조 원을 동원하고, 기업들은 220조 원 규모의 10대 대표 사업을 추진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수송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 전기·수소차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돈의 흐름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후금융 790조 원의 통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5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고, 그 가운데 지방 지원을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 기반은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산업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연내 지정을 추진한다.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위한 2040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도 마련한다. 그런데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돈이 닿아야 할 현장의 준비 상태가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1,356곳이 신청했지만 선정된 곳은 444곳이었다. 수출기업 300곳을 조사했더니 99.3%가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를 이미 요구받았거나 앞으로 요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사업 이후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로 해외 바이어나 원청에 배출량 데이터를 냈는지, 그 데이터가 제3자 검증을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부는 내년 10억 원 규모 시범사업을 편성하고, 2027년 정밀화학·석유화학 원료와 플라스틱 제품, 2028년 자동차부품·냉난방기·선박부품으로 대상을 넓히는 안을 제시했다. 같은 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 금고 평가에 기후금융 지표를 넣은 기초자치단체가 22%뿐이라고 분석했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70%를 쓰겠다고 해도, 그 돈을 받을 기업이 데이터를 내지 못하고 민간 은행을 끌어들이는 공공금고의 평가 칸이 비어 있으면 1,000조 원은 계획표 위에만 남는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한국의 7개 매체가 「K-GX」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4.7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0건이다.

한국 시사점 — 녹색대전환 전략의 성패는 발표된 총액이 아니라 790조 원이 중소·중견 기업에 실제로 도달하는 비율에서 갈린다. 정부가 정한 '중소·중견기업 70% 이상'을 확인하려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집행 실적을 기업 규모와 지역별로 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 중소기업 99.3%가 탄소 데이터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지원사업 선정률이 3분의 1에 그치고 사후 추적이 없다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지적은 재원보다 데이터 역량이 먼저 병목이라는 뜻이다. 임팩트 조직과 중간지원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 데이터 산정과 검증을 묶어서 지원하는 공동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심층 — 대형 재원 계획이 중소기업에 닿지 못하는 세 개의 병목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 국정감사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 지자체 금고 평가)

왜 지금 중요한가. 1,000조 원은 한국 녹색 정책 사상 가장 큰 숫자이고, 그 가운데 79%가 재정이 아니라 금융이다. 금융은 빌려주는 돈이라 받는 쪽이 갚을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 줘야 한다. 탄소 전환 대출에서는 그 근거가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미 거래처로부터 데이터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은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만, 정부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제출되고 검증되는지 모른다.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금융도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번 전략이 성공하려면 돈보다 먼저 데이터가 흘러야 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이미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사다. 정책금융의 70% 중소·중견기업 배정에서 심사를 통과할 준비가 된 기업이 먼저 자금을 가져간다. 대표 사업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2차·3차 협력사와 비수도권의 소규모 제조업체다. 지자체 금고 평가에 기후금융 지표를 넣은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4.4%뿐이라는 숫자는, 지방의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녹색 대출을 늘릴 공적 유인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책이 정한 '지방 50%'와 현장의 유인이 어긋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정부는 기후테크 생태계 법 제정 세부안을 10월 중 따로 발표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 일정 안에 중소기업 탄소 데이터 지원을 끼워 넣어야 한다. 방법은 세 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10억 원 시범사업에 '제출과 검증 여부'를 성과 지표로 넣어 사후 추적을 의무화할 것, 정책금융기관의 전환금융 심사에 중소기업용 간이 산정 방식을 인정할 것,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 평가에 공통 기후금융 지표를 정할 것이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지원기관은 산단 단위로 탄소 데이터 산정을 대행하는 공동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1,000조 원이라는 총액에 주목하면 그 안의 구성이 가려진다. 해외 매체는 이 전략을 민간 사업 비중을 다르게 나눠 보도하기도 했는데, 확정된 구조는 정부 발표의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민간 대표 사업 220조 원'이다. 민간 220조 원은 기업이 발표한 계획이지 정부가 보장한 투자가 아니다. 또 99.3%라는 숫자는 '요구받았거나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친 것이라 이미 요구받은 비율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섞어 쓰면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된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정부, K-GX 녹색 대전환에 1000조 푼다...민간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 · ESG Today (국제, 2026-10) — South Korea Launches \$750 Billion Decarbonization Strategy · IMPACT ON (한국, 2026-10) — [국감 ESG 브리핑] "탄소데이터 99.3% 요구" 중소기업 대응 공백...태양광·전기요금도 도마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남게 하는 법 — 광명의 조례·앵커기관 14곳·조달 데이터 1만 6,510건, 그리고 13일의 국제포럼

인구 29만여 명의 광명시는 서울과 붙어 있어 사람과 소비가 모이지만, 그 부가 지역에 남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광명시가 택한 답은 영국 프레스턴에서 시작된 '지역공동체 부 순환' 모델이다. 지역 안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돌게 만드는 전략으로, 외부 투자 유치에 기대는 기존 성장 방식과 다르다. 제도는 빠르게 쌓였다. 광명시의회의는 4월 1일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시는 지역에서 생긴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체계를 수도권에서 처음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기본계획과 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체계,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과 지역제품 구매 촉진, 금융기관 연계 투자·융자와 이자 차액 지원이 담겼고, 공공 서비스를 위탁할 때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8월에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담 정책연구 조직을 신설했다. 프레스턴 모델의 핵심이 병원·대학 같은 지역 거점기관의 구매력이었듯, 광명은 2025년 12월 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사·KTX광명역·기아 오토랜드 광명·대학병원 등 시를 포함한 14개

기관과 지역 제품 우선구매 협약을 맺었다. 로컬브랜드 참여기업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었다. 데이터에서 출발한 것도 프레스턴과 닮았다. 프레스턴은 2013년 거점기관 조달지출 가운데 지역에 남는 몫이 5%뿐이라는 진단에서 시작했다.

광명은 최근 3년간 조달청 공공재정 집행 데이터 1만 6,510건을 분석해 수의계약 지역제한과 우선구매 특례 활용, 대형 사업의 지역 참여 유도, 관내 약 2,800개 기업의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전략을 냈다.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는 2026년 1월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넘겼고, 9월 30일에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2028년까지 최대 15억 원의 국비도 확보했다. 시는 13일 국제포럼에서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300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 공공조달 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내놓는다. 미국·스코틀랜드·일본의 발표자와 안성·대전 중구·영암의 단체장이 함께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를 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지역공동체 자산화」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한국 시사점 — 광명이 부딪힐 가장 큰 벽은 도시 성장의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다. 광명시 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는 사업 주체가 시가 아니라 공공사업시행자이고, 지역제한 입찰도 경기도 단위라 광명 업체만 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서는 남양주시가 1월 공공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상공회의소와 꾸린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처럼 일감과 자재·인력을 지역으로 돌리는 방식에 있다. 스코틀랜드는 400만 파운드 이상 공공조달에서 지역편익 조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 공고에 밝히도록 했다. 광명의 2,800개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그 조건을 채울 공급 목록이 될 수 있다.



심층 — 지역 순환이 '선의'가 아니라 '조달 규칙'이 되는 조건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 앵커기관 협약 · 조달 데이터 분석 ·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왜 지금 중요한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근거가 생겼지만, 법은 체계를 정할 뿐 돈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조달 규칙이다. 광명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은 선언보다 데이터와 규칙을 먼저 쌓았다는 것이다. 1만 6,510건의 지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품목을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 어느 거점기관의 구매가 밖으로 새는지 숫자로 보인다. 앞에서 본 스페인의 도매 기관이 위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방식이라면, 광명은 이미 쓰이고 있는 공공의 돈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추가 재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에 특히 현실적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공공서비스 위탁과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사회연대 경제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다. 우선 고려 조항과 수익계약 지역제한이 실제로 작동하면 판로가 생긴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이득을 본다. 불리해지는 쪽은 그동안 광명의 공공 구매를 가져가던 외부 공급업체다. 다만 이 대립을 키우면 역효과가 난다. 지역 우대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면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금융과 교육이 조달 규칙과 짝을 이뤄야 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13일 포럼에서 광명이 공공조달 비율 10% 목표를 발표하면, 다른 지자체가 비교할 수 있는 첫 수치 기준이 생긴다. 다른 지자체가 지금 따라 할 수 있는 순서는 분명하다. 먼저 자기 지역 공공지출 데이터를 조달청 자료로 분석하고, 거점기관과 우선구매 협약을 맺은 뒤, 조례로 재투자 평가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 분야 조직에게는 문체부의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가 지역 조달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현실적인 입구다. 시행령 논의에는 지자체의 지역 재투자 평가를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실적과 연동하는 조항을 제안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지역화폐 누적 발행 1조 원은 성과처럼 보이지만, 10% 이상의 할인율이 재정으로 유지돼 온 결과이기도 하다. 할인이 줄면 순환도 줄 수 있다. 또 앵커기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무협업체가 실제 구매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광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4개 기관의 관내 구매 비중을 해마다 공개하는 것이다. 숫자가 공개돼야 프레스턴처럼 '5%에서 몇 %로 올랐다'는 말이 가능해진다.

출처: 라이프인 (한국, 2026-10) — 광명은 어디까지 왔나: 조례·앵커기관·공공구매로 짜는 '수도권 도시형 CWB'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광명시-희망제작소, 13일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2026-10) —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도 시작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미국 대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계속 내지만 알리지는 않는다. 자문사 테네오가 S&P 500 기업의 2026년 보고서 250건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보고서를 낸 기업의 87%가 올해도 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함께 낸 곳은 32%로 2022년 62%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제목에 'ESG'를 쓴 보고서는 35%에서 4%로 줄었다. 반대로 데이터에 외부 검증을 받은 비율은 54%에서 75%로 올랐고, 목표 하나 이상이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밝힌 기업도 9%에서 12%로 늘었다. 인력 구성 데이터를 공개한 기업은 92%에서 64%로 떨어졌다. 말은 줄이고 숫자의 신뢰도는 높이는 방향이다.

출처: ESG Dive (미국, 2026-10) — [Most companies still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but publicizing less: report](#)

국내 ESG 펀드도 수익률은 앞섰는데 돈은 빠졌다. 지난 호 이 지면이 전한 세계 지속가능 펀드의 흐름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주식 액티브 ESG 펀드의 3년 수익률은 약 265%로 일반 펀드(약 197%)를 앞섰지만, 위험 대비 성과를 보여 주는 샤프 비율은 모든 기간에서 더 낮았다. 상반기 국내 ESG 펀드에서는 2조 8,508억 원이 빠져나가 3개 반기 연속 순유출이었고, 그 93%가 채권형이었다. 펀드 수는 185개, 순자산은 9조 1,28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 줄었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국내주식 액티브 ESG펀드, 3년 수익률 265%…비ESG보다 68.1%p 높아](#)

기업 130곳이 정부에 "자연을 해치는 보조금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기업 연합체 비즈니스포네이처가 6일 발표한 공개서한에는 네슬레·유니레버·다논·H&M그룹·라보뱅크·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30곳 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명했다. 이들은 토양과 물, 생태계를 해치는 데 쓰이는 공공보조금이 해마다 최소 2조 6,000억 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5%에 이른다며, 1년 안에 관계부처 합동 개혁 기구를 꾸리라고 촉구했다.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196개 당사국이 2025년까지 유해 보조금을 전수 식별하기로 했지만, 포괄적 감축 목표를 세운 나라는 5%에 그쳤다고 연합체는 밝혔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같은 회의 기간인 22일 자연 관련 공시 실무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네슬레·유니레버·L&G 등 130개 기업 "자연 훼손 보조금 매년 2.6조원"](#) · [IMPACT ON \(한국, 2026-10\) — ISSB, 22일 자연공시 초안 공개…사업장 위치·가치사슬까지 평가](#)

영국 사회적기업계가 '100만 파운드 미만 계약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 사회적기업 연합체는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사라진 100만 파운드 미만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가중치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100만 파운드를 넘는 계약에만 사회적 가치 요건이 붙는다. 스페인에서는 공공 건설 입찰서 300건을 분석한 결과 평가 기준 28개 중 절반 이상을 담은 입찰서가 42건(14%)에 그쳤다는 조사가 나왔다. 앞의 광명 꼭지가 보여 주듯, 조달 규칙의 작은 문턱이 사회적경제의 판로를 정한다.

출처: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UK Labour conference: at last a government truly committed to building a social economy?](#) · [Compromiso Empresarial \(스페인, 2026-10\) — Solo el 14% de los pliegos de construcción pública integra ampliamente la sostenibilidad](#)

미일 소셜 임팩트 리더 37명이 19일 도쿄에 모인다. 일본의 비영리 중간지원조직 에틱이 사무국을 맡은 미일 소셜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가 10월 19일부터 사흘간 도쿄 하루미에서 두 번째 연례 포럼을 연다. 미국의 비영리 경영·자선 분야 리더 7명과 일본 21개 단체의 리더 30명이 사회 분열·인구 감소와 고령화·고립·격차를 주제로 토론하고, 지역 재건과 새로운 자금 조달 구조를 함께 논의한다. 미국 쪽 참가자들은 그 전에 가나가와현의 비영리 현장을 둘러본다. 같은 주 미국의 대표적 기후 투자자 연대 세레스는 2003년부터 이끌어 온 민디 러버 대표가 2027년 말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출처: ETIC. (일본, 2026-10) — [【日米連携】](#)

[社会課題に挑む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リーダー37名が東京に集結](#) · ESG Dive (미국, 2026-10) —

[Ceres CEO to step down after 2027](#)

05 이번 호 전망

이번 호 전망 없음 — 기한과 판정 기준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후보 세 건이 고령 기술과 제3섹터 보도량에 관한 것이라 이 지면의 소재(임팩트의 주체·자본·제도) 밖이었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지난 4개 호에서 이 지면은 「몇 개월 뒤 한국에 닿는다」 같은 시기 주장을 30번 했지만, 판정 기준과 기한을 붙이지 않아 맞았는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은 채점에 넣지 않았고, 이번 호부터는 기한과 기준을 붙인 전망만 낸다.

07 편집장의 글

① 손해를 정직하게 적는 용기

이번 주 가장 오래 남는 숫자는 0이다. 세니아스는 4년간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빈곤 현장에 넣고 실질 수익 0을 거뒀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목표 달성이라고 불렀다. 임팩트 업계가 오랫동안 피해 온 말이다. 수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어려운 현장, 즉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돈이 닿지 않는 곳을 계속 바깥에 두었다.

컨버전스의 보고서가 보여 주듯 상업 자본은 먼저 손실을 받아 주는 층이 있을 때만 움직이고, 그 층은 원조 삭감으로 얹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손실을 감추는 화려한 수익률 표가 아니라 '이만큼을 포기하고 이만큼을 얻었다'는 정직한 장부다. 손실을 정직하게 적은 돈만이 다음에 다시 손실을 감수할 명분을 얻는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이 이 장부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수익률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② 규칙을 만드는 방의 의자

이번 주 국제 표준을 둘러싼 논쟁은 내용보다 자리에 관한 것이었다. 인증서를 배출량과 분리하느냐는 기술적 질문 뒤에는, 그 결정을 내리는 방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44개 시민단체가 원칙 10개를 내놓았고, 유럽의 공시 위원회 의장은 5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고, 미국 규제당국은 투자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세 장면은 방향이 다르지만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지속가능성 규칙이 자발적 지침에서 의무와 금리와 조달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 규칙을 만드는 자리는 이제 가장 치열한 이해관계의 현장이 됐다. 한국의 임팩트 업계는 그동안 국제 규칙을 받아서 적용하는 쪽에 서 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서명은 작은 출발이지만, 규칙을 만드는 방의 의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위원회와 금고 평가표처럼 가까운 방의 의자부터 살펴야 한다.

③ 소유와 측정은 한 쌍이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사겠다고 나서고, 재단이 지배권을 쥔 채 회사를 상장하고, 공동체 소유 태양광에 펀드가 돈을 댔다. 같은 주 다른 글들은 측정이 투자자를 위해 설계돼 현장에는 쓸모가 없고, 때로는 피해를 아예 보지 못하게 짜여 있다고 고발했다. 두 이야기는 따로 보이지만 한 쌍이다. 누가 소유하느냐가 바뀌면 무엇을 재야 하는지도 바뀐다. 투자자가 소유한 체계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을 재고, 공동체가 소유한 체계는 공동체가 겪는 것을 쥔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에서 차입자의 피해가 정책 밖에 놓인 것은, 그 피해를 재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광명이 조달 데이터 1만 6,510건을 직접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이 자기 돈의 흐름을 스스로 재기 시작하면, 그 돈을 지역에 남길 규칙도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임팩트 업계가 이번 주에 스스로 물어볼 것은 세 가지다. 우리가 감수하는 손실과 그 대가로 얻는 임팩트를 같은 장부에 적고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재는 지표는 우리에게 돈을 대는 쪽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위한 것인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이 정해지는 이번 가을은 세 질문 모두에 답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드문 시기다.

